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04호 (2013-34) 발행일 : 2013. 08. 23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초혼연령 및 미혼율의 상승 등 최근 우리나라의 혼인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준

혼인력의 약화는 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혼인지원 정책은 매우 제한적

혼인율을 높이고, 혼인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실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혼인지원 정책의 정책 대상의 확대와 함께 청년 정책과 연계된 종합적 혼인지원 정책이 필요



이상림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 혼인연령 및 미혼율의 증가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혼인 경향의 변화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전반적인 혼인력의 감소는 출산력의 저하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
 -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불과 2%를 차지하는 국내 현실에서 미혼율의 증가는 출산 가능한 부모 수의 감소를 의미하여 사실상 출산 규모를 제한하는 기본 전제
 - 혼인 연령의 지속적 증가는 출산이 가능한 여성(부부) 수를 감소시켜 출산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혼인한 부부의 출산 가능기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
 - 만약 2010년 혼인력이 2000년 수준이었다면 2011년 출생아수가 4.6% 상승하는 효과
 - 더불어 혼인력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
 - 성인 자녀의 독립시기를 늦춰 노부모의 노후준비 자원 축소를 유발하고, 미혼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및 고독사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

- 혼인지원 정책은 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인 혼인지원 정책들도 그 실효성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중앙정부의 주요 혼인지원 정책들은 사실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미혼남녀 만남 추선 행사 등의 이벤트성 사업이나 국제결혼 지원으로 한정되어 혼인 유발에는 한계
 - 정부의 혼인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 등과 같이 경제적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환경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인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고, 통계청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혼인 경향의 변화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범위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함

2. 국내 혼인 동향 변화

- 우리나라에서 평균 초혼 연령은 꾸준히 증가 중인데, 1998년과 2012년 사이 초혼 연령은 남성 만 28.8세에서 만 32.1세로, 여성의 경우는 만 26.0세에서 29.4세로 각각 3.3세와 3.4세의 증가
 - 동년배 부부와 여자 연상 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2.8세의 부부 간 연령 차이가 10여 년간 유지
 - 이러한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베트남 출신의 매우 낮은 연령의 외국인 신부와 높은 연령의 내국인 신랑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증가에서 비롯
 - 내국인의 초혼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 10년 동안 남성은 거의 같은 수준의 평균 초혼연령 증가를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2.7세 증가하여 약 0.3년 더 높은 증가추이
 - 이는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 기피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표 1〉 성별 혼인형태별 초혼연령의 증가 추세

(단위: 세)

	전체 초혼		내국인 초혼	
	남	녀	남	녀
1998(a)	28.8	26.0	28.7	26.0
2005	30.4	27.2	30.3	27.4
2010(b)	31.3	28.4	31.3	28.7
차이 (b-a)	2.6	2.4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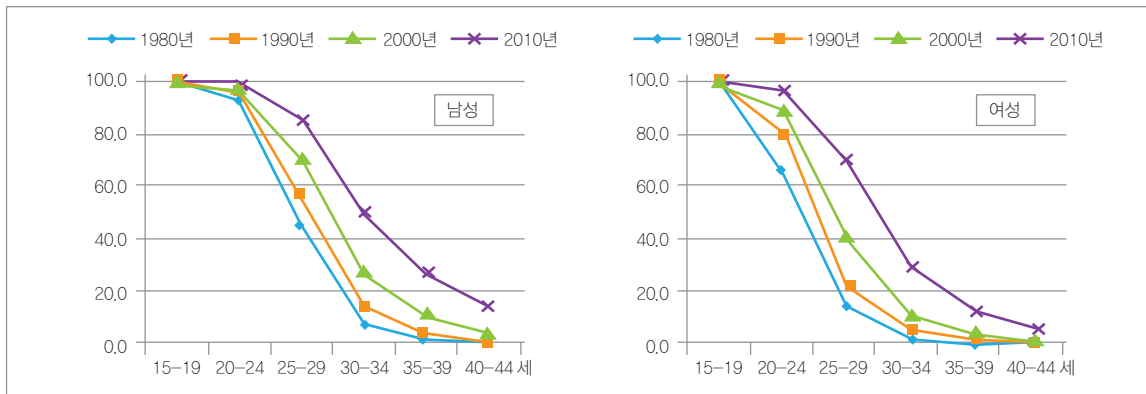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 혼인연령의 증가와 함께 미혼자들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980년과 2010년 사이 30년 동안 남녀 모두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현재 30대 초반 남성의 50.2%와, 20대 후반 여성의 69.3%가 미혼으로 남아있으며, 미혼율의 분포에 있어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여성 20대 초반 이후, 남성 20대 후반 이후의 급격한 미혼율 감소 패턴이 상당 부분 완화

○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미혼율의 증가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30대 초반 연령 집단에서 미혼자 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여성은 20대 후반 그룹에서 가장 높은 미혼율 증가

- 남성의 미혼율 증가는 여성과 달리 20대 중반 이후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증가했는데, 30대 중반과 40대 초반 고연령층의 미혼율도 높은 수준의 증가
- 여성 30대 중반 이후 연령층에서 미혼율 상승이 더딘 것은 30대 중반 이전에 혼인하려는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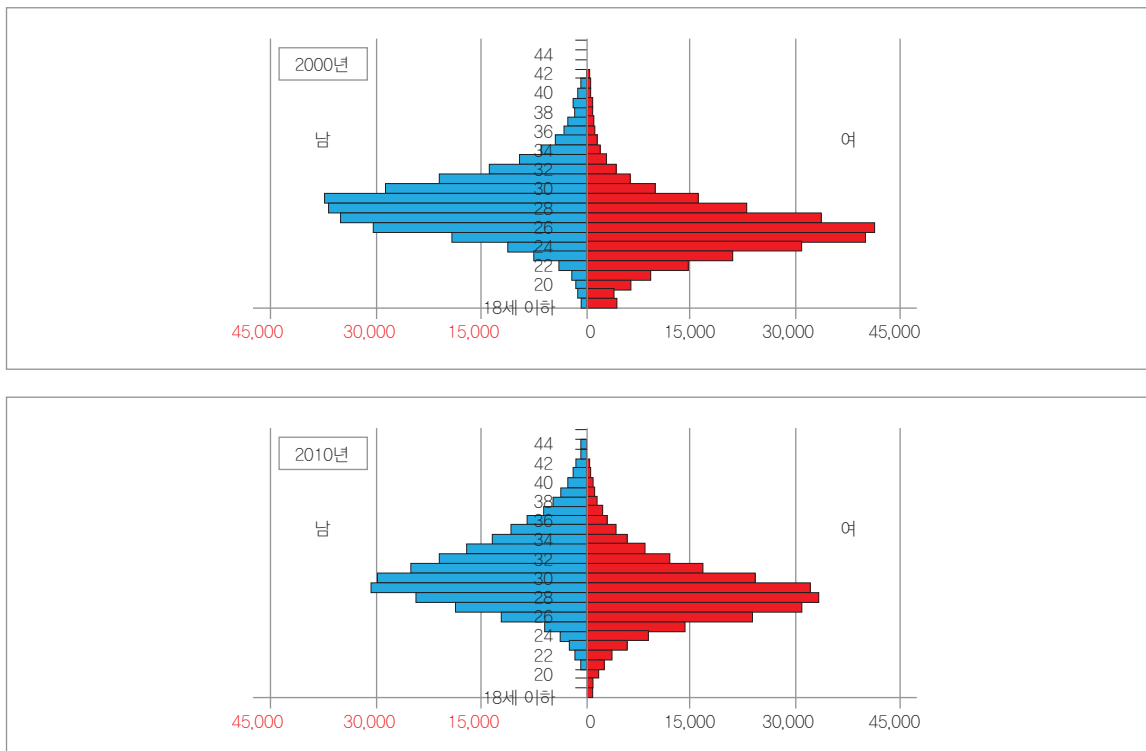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미혼자 비율 증가 추이(1980~201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연도)

- 2000년과 2010년 사이 혼인연령의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성별 혼인 연령분포가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는 주 혼인연령 코호트의 인구크기 변화와 혼인율의 감소에 기인

[그림 2] 성별 초혼연령 분포(2000년, 2010년)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2000, 2010)

- 2000년에는 최빈값인 남성 29세, 여성 26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2010년에는 최빈 연령 중심의 집중도가 크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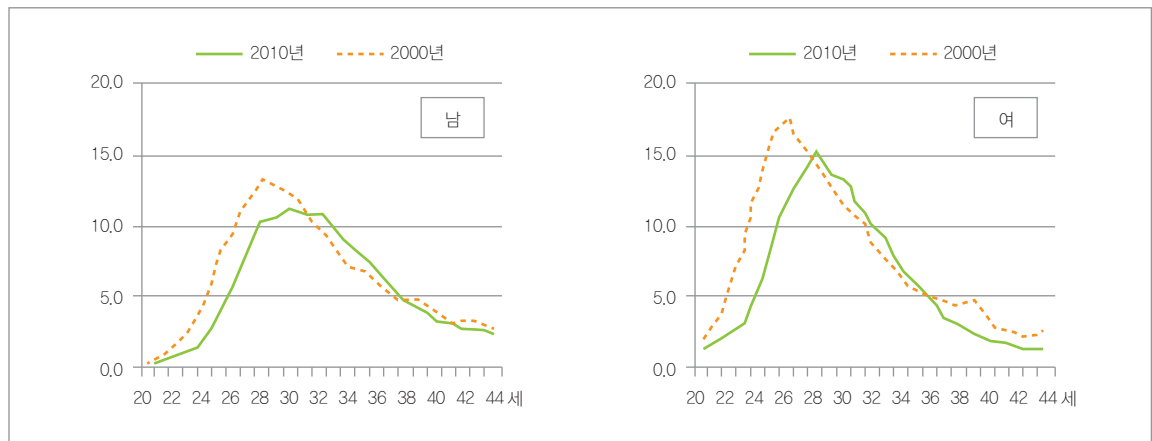
○남녀 모두 2000년에는 최빈값 이전 연령의 혼인건수가 더 많았으나, 2010년에는 최빈값 이후 연령의 혼인이 더 많은 분포로 변화

○이는 ‘특정 연령까지는 결혼해야 한다’는 ‘미혼한계 연령규범’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연령 규범의 약화 경향은 과거 연령 분포를 볼 때 남성에게서 먼저 나타나고, 여성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줌

- 앞서의 여성 초혼 연령의 빠른 증가, 30대 초중반 여성의 미혼율의 급격한 증가 등의 결과들을 함께 고려할 때 제시된 ‘미혼한계 연령규범’의 빠른 약화는 앞으로 30대 중후반 미혼자 여성인구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혼인연령이 크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

○여성 초혼연령의 증가와 미혼율의 증가는 혼인시장 내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남성 초혼연령 및 미혼율의 동반 상승과 함께,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그림 3] 연령별 혼인이행률의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혼인통계(2000, 2010)

-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하는 혼인이행률의 연령별 분포에서 2000년과 2010년 사이 20대의 혼인이행률이 감소하고, 30세 전후부터의 고연령층에서 혼인이행률이 증가하는, 전반적으로 혼인이행률의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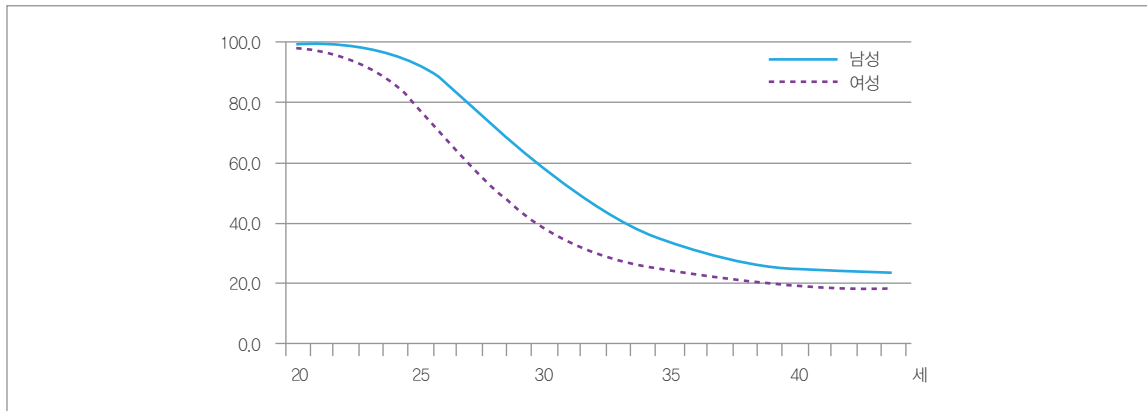
○혼인이행률의 최고치가 나타나는 연령의 혼인이행률은 과거 10년 동안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여성 최고치의 감소가 더 선명하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최고치 집중이 사실상 사라지는 분포로 변화

- 이는 미혼한계 연령규범의 약화가 상당 수준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며, 여성에서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반적인 고령연령 혼인이행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혼인이행률이 2000년에 비해 더 낮아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적극적 혼인포기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이러한 적극적 혼인포기는 여성에게서 크게 증가

- 고연령으로 갈수록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지는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고연령 미혼여성의 혼인 포기를 강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혼인력의 약화 경향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함께, 앞으로 혼인 포기의 증가에 따른 미혼 노인도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

[그림 4] 미혼 잔존확률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혼인통계(2000, 2010)

- 2010년의 연령별 혼인이행률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미혼 잔존확률을 추정된 결과(생명표 분석 방식)는, 앞으로 혼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고령 미혼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혼인율 분포는 여성은 이십대 중반,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미혼자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성 삼십대 초반, 남성 삼십대 중반부터 그 감소세가 완화되는 분포를 구성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여년 후 44세 남성의 무려 23.8%, 여성의 18.9%가 미혼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 이는 2010년 센서스의 44세 미혼자 비율, 남성 10.1%, 여성 4.6%를 크게 상회하는 충격적인 수치
- 이러한 분석결과는 추가적인 혼인력 약화 없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도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가까운 장래에 혼인력의 반등 없이 출산력의 증가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

3. 혼인지원 정책 실태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혼인 지원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
-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혼인지원 정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의 영역 중 ‘가족형성 여건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추진
 - 혼인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정책(국교부)을 핵심으로,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국방부), 국공립 대학·대학원 내 학생부부 기숙사 확대(교육부),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등 일부 정책들이 포함

- 출산 정책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마련과 관련된 결혼 지원정책은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정책이 있음
 - 주택정책은 그 기초가 되는 국민주택기금법에서 알 수 있듯이 무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등의 실제 정책 지원은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시행
 -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과, 공공주택 사업(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분양 등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지원 대상 범위와 내용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물량이 매우 한정적이고 잔여적 주택 지원의 성격이 강해 일반적 미혼자들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많은 한계
- 출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지원 정책은 그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지원 내용(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이 현실적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
- 이들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상 이미 가족을 형성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한계를 포함
 - 분양권 배정 시 다자녀 부부 가산점 부여 등 실제 정책 실행에서 사실상 미혼 혹은 신혼 초기 부부를 제외하는 결과
- 현재 혼인지원 정책들은 주거비용 절감 등의 주택문제에만 집중되는데, 결혼비용 절감 이외의 다른 제도적 사회적 노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
 - 주택비용 부담의 증가가 혼인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단계 혹은 결혼 초기의 신혼단계의 결혼비용의 문제에만 집중
 - 주택비용 등 혼인 관련 경제적 비용 절감에 집중된 정책은 가족형성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노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혼인지원 이외 다른 영역의 저출산 정책들은 근로조건, 노동시장, 사회적 인식 등에서 포괄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시도 중
 - 일가족 양립 환경마련이나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비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홍보 및 제도개선 사업이 실시 중
- 지방자치단체의 혼인정책도 다른 저출산정책에 비해 예산규모나 사업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미혼 남녀 만남주선 등 이벤트성 사업(광역)과 국제결혼지원 및 건강검진(기초)에 집중
 - 국교부의 주택정책 등 중앙정부의 혼인지원정책은 지자체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극히 낮으며, 예식장 제공 등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결혼 비용경감 사업 등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부족
-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이행 과정을 돕는 혼인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 수준도 높은 것으로 여겨짐

-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정책으로서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결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미혼남성의 76.3% 그리고 미혼 여성의 76.2%를 차지
-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구체적 혼인지원 정책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청년 실업 해소(36.1%), 서민층의 주택용자(18.9%), 혼인 및 출산 가치관의 확립(17.7%)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들로 응답
- 결혼의 특성 상 정책지원을 통한 혼인력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혼인비용 절감 정책과 함께 포괄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 경제적 지원 일변도의 혼인지원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의 불평등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반감과 정책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

<표 2>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영역별 지역 분포 (단위: 건, %)

	광역시자체	기초 지자체
계	230(100.0)	2,057(100.0)
결혼	11(4.8)	95(4.6)
임신	21(9.1)	454(22.1)
출산	34(14.8)	615(29.9)
육아	94(40.9)	610(29.7)
인식개선	48(20.9)	144(7.0)
기타	22(9.6)	139(6.8)

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제외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4. 정책방안

- 국내 혼인 동향의 변화 양상들을 다양한 인구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저출산 정책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인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앞에서 검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혼인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그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앞서 제시된 혼인력 약화 경향의 국내 혼인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혼인율을 높이려는 정책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줌
- 혼인지원 정책은 특정 연령 인구에 대한 혜택 제공이 아닌, 저출산 등 전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가까운 장래에 혼인율의 증가, 혼인연령의 감소 등 가시적인 혼인력의 반등 없이 출산력의 제고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불어 미혼율 및 초혼연령 증가 등 혼인력의 지속적인 악화는 부부 수의 감소 및 부부 출산기간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의 출산유발 효과도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 혼인력의 제고를 위한 혼인 지원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 수준에서 혼인율을 올리기 위해 혼인건을 늘리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평균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 젊은 연령층의 혼인을 늘리는 것은 자녀 재생산 기간을 늘려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출산력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
 - 또한, 고연령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심화될 수 있는 혼인시장의 왜곡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
-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혼 부부 지원 중심의 결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연령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할 필요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은 실제 미혼자들의 결혼 생활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혼인 예정자 포함 등의 적극적 대상 확대가 필요
- 지자체 차원의 혼인지원 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이벤트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예비부부의 혼인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더불어 지자체의 주택정책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컨설팅 등의 지방정부와의 혼인지원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혼인 지원으로 확대된 주택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절감, 일자리 나눔, 성인 자녀 독립지원 등 포괄적 정책접근이 가능하도록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

〈표 3〉 결혼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결혼 정보제공 국방부/교과부 혼인자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정책과의 연계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 확대제공 국민주택 혼인 예정자 포함
지방정부	건강검진/혼인비용 경감사업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지역자원 활용 활성화 - 예식장 제공 등 결혼 비용 절감 사업
연계사업		출산비용 절감 지원 및 범국민 캠페인 주택지원 사업 공동 추진

집필자 | 이상림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8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